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6769
----------	------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회의정보
원자력 안전법 일부개 정법률 안	2202464	박지혜의원	2024. 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1.27.) 상정</li> </ul>
	2203741	최민희의원	2024.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1.27.) 상정</li> </ul>
	2204408	박충권의원	2024.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1.27.) 상정</li> </ul>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4.11.27.)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 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에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운영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안전성 확인을 거쳐 해당 시설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운전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계속운전의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은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부과·징수 근거를 두고 있어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부담금의 부과목적을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그리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 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원자력기금 원자력 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등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영(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목적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로 변경함(안 제111조의2제1항).

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를 체납된 부담금의 20%로 하향 조정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11조의3).

라.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로 원자력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안전문화 확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

성 ·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추가함(안 제111조의4제2항).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정성평가에”를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하거나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방법”을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 중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를 “계속운전하기”로 한다.

법률 제20533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제1항 중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사전검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

사업자 또는 관독업무자”를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승인·신고·등록·사전검토·교육훈  
련 또는 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  
는 관독업무자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  
10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핵물  
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제111조의3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를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  
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  
하여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11조의4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태료”를 “과  
태료(과태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 12.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 1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 15. 그 밖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원자력 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11조의3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허가기준) ① · ② (생략) <u>&lt;신 설&gt;</u>	제21조(허가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정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 ----- ----- -----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하거나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현행	개정안
<p>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u></p> <p>3. (생략)</p> <p>② ~ ⑤ (생략)</p> <p>법률 제20533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위원회는 <u>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사전검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단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p> <p><u>&lt;신설&gt;</u></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계속운전하기</u>-----</p> <p>-----</p> <p>-----</p> <p>3.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20533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u>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u>-----</p> <p>-----</p> <p>-----</p> <p>-----</p> <p>-----.</p> <p>1. <u>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승인·신고·등록·사전검토·교육훈련 또는 수출입요건</u></p>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② ~ ④ (생략)</p> <p>제111조의3(강제징수) ① (생략)</p> <p>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③ · ④ (생략)</p> <p><u>&lt;신설&gt;</u></p>	<p><u>확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u></p> <p>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1조의3(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납부기한의 다음</u> <u>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u> <u>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u> <u>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u> <u>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바에 따라</u>-----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위원회는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p>

현행	개정안
<p>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p> <p>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p> <p>4. ~ 11. (생략)</p> <p>②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u>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u></p> <p>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3. ----- ----- ----- --<u>과태료(과태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u></p> <p>4. ~ 11. (현행과 같음)</p> <p>② ----- ----- -----.</p>

현행	개정안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p>
<p>5. ~ 8. (생략)</p>	<p>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p>
<p>10.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p>	<p>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p>
<p>9. (생략)</p>	<p>11. (현행 제9호와 같음)</p>
<p>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p> <p><u>&lt;신설&gt;</u></p>	<p>12.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p>
<p>11. (생략)</p> <p><u>&lt;신설&gt;</u></p>	<p>1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p>
	<p>14. (현행 제11호와 같음)</p>
	<p>15. 그 밖에 원자력 및 방사선</p>

현행	개정안
③ (생략)	<u>안전, 원자력 통제 및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현행과 같음)